

# 광주서 교회 국제학교 원생·가족 감염

1월 교회 운영 국제학교서 100명 이상 감염

원생 대부분 백신 미접종...방역당국 긴장

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국제학교와 어린이 선교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당국이 긴급 위험도 평가에 나섰다.

광주에서는 지난 1월 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향이 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 이하 원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구의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동구소재) 학생과 어린이선교원 원생, 가족 등 3명의 감염이 확인돼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10대 이하 자녀 1명은 동구지역에 있는 대형교회의 국제학교, 1명은 남구의 교회 어린이집에 지난 23일까지 등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보호자 중 확진된 1명은 지난 24일 남구의 한 대형교회의 주일에 배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이를 토대로 동구의 교회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23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교회 어린이선교원에서도 8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예배 참석이 확인됨에 따라 교인

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녔던 국제학교와 어린이집, 교회에 대해 임시폐쇄명령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유증상 검사를 받은 시민 1명이 감염돼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접촉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광양소방, '햇빛어린이집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광양소방서는 지난 19일 광양중마동에 소재한 햇빛 어린이집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은 운영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남부소방, 지역 주민 대상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이달 30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소방, 한국119청소년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 방문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20일 오후 관내 한국119청소년단인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20여명이 북구 소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22일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간 도로시설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성경찰서·보성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학교폭력·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21일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과 병행하여 학교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을 광양경찰서 백운마루에서 개최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민간항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승원엔지니어링(대표 김형중)과 해상치안, 수색구조 및 해양환경 감시활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비판 퍼포먼스하는 환경단체

환경보건의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발언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에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방류를) 미루기 어렵다고 통감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후쿠시마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과 딸기농장 등에 방문해 농산품을 직접 먹는 시연을 펼쳤다.

환경보건의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

## ‘대장동 후폭풍’ 광주 침단3지구 개발 급제동

광주도시공사, 분양 예정가격·수익률 등 ‘현미경 검증’

검증 과정 최소 1~2개월, 사업 지연 등 부작용 우려도

1조원대 광주 침단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증해 과도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기로 했다.

초과이익은 공공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고, 전국을 뒤흔든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며 선을 그어 있다. 막대한 초과이익을 몇사람이 수백억씩 챙긴 대장동 사례가 재연돼선 안된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사전 검증이 당초 공모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조항인데다 검증기간만 최소 1~2개월 예상돼 사업 지연과 차질, 뒷북 행정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는 25일 침단3지구 대 행개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 예정가격과 수익률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단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증 결과, 적합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 예정가와 수익률을 명시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분양 결과 계획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준용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개발에 따른 과도한 민간 이익 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특정업체가 공동주택 3861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 들여 시행사 측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자치21은 최근 임정문을 통해 “공모 지침 등에 따르면 3.3㎡ 1500만 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 2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계산이 맞다면 민간수익률은 50%에 달해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환수 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또 공모지침 중 ‘유동비용 200%’, ‘건축 5조 원, 토목 5000억 원’, ‘재공도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판교 대장지구와 비교되는데 대해 “대장지구는 민간합동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이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딸’이 시행자로, 분양 수입 4000억에 분양가 상한제없이 수익계약으로 4500억의 과도이익을 남겨 문제가 된 곳으로, 분양 수입 100% 환수,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공개가 적용된 침단3지구와는 근거법, 사업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도 석연찮은 대목은 없지 않다.

건축실적 5조 원, 토목 5000억 원 기준은 9개 대기업이 부합하지만, 유

동비용 만점기준인 200%까지 적용할 경우 3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H사 단 한 곳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도한 초과이익’의 기준을 수익률 10% 내외로 할지, 이보다 낮은 7~8% 수준으로 할지 정해진 기준이 없고, 공모조건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허술한 공모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검증에만 최소 1~2개월, 이후 협상까지 감안하면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과 행정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독진소시업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한 H진소시업이 사업계획서 검증과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제재”라며 발을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민군 도시공사 사장은 “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 들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철저한 검증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R&D)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방기업인 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 중 AI 집적단지과 국립 실험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침단3지구 개발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단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지 일부를 대행개발기로 결정했다.

서선숙기자



수돗물 녹물 등으로 오염된 필터. (사진=독자 제공)

영암, 상수도관

노후화 ‘심각’

영암군의 상수도관 노후화가 심각해 수돗물이 황갈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적수현상, 일별 녹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영암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영암군 관내 상수도 전체 관로 1187km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가 117km로 9.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16년 이상 경과 시점을 적용할 경우 관내 모든 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정도다.

이같은 상수도관 노후화로 영암군의 수돗물 유수율(流水率)은 전국 평균 84%에 크게 못미치는 47.7%에 불과하다.

또 영암군의 올 상수도 총 예산 333억원 중 204억원(61.2%)이 적수현상 처리 관련 예산이다.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적수현상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수돗물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수돗물 관련 주민민원은 지난 2020년 522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말 현재 237건에 이르고 있다.

읍면별로는 상수도관 노후화가 심각한 삼호읍 지난 2년 동안 27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군서 184건, 학산 121건, 서호 89건, 시종·도포·미암에서 각각 30건 안팎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아토티크 앓고 있는 아이 걱정돼 생수 사다 씹긴다”, “장사도 어려운데 가게 문을 열 현판이 못된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녹물은 강관 등 관로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 노후관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삼호는 2024년, 군서는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연차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의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조대호기자